

정치적 갈등 키운 민주 경선...민심 분열 막아야

민주당 광주·전남 공천 결산

③ 선거 후유증 봉합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광주·전남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지역 특성 속에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면서 불공정 시비와 대리투표 의혹, 후보 간 고발전, 경선 불복 논란까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며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각 선거 구마다 네거티브 공방과 의혹 제기가 반복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수사와 법적 대응으로까지

통합특별시장부터 기초단체장까지 공천과정 혼란 허위정보 확산에 고소고발 난무... 후보간 앙금 여전 유권자 피로감 커져...“경선 방식 등 더 투명해야”

변졌다.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시작 단계부터 잡음이 이어졌다. 예비 경선 직후 후보별 권리당원 득표율과 순위를 담은 이른바 ‘지라시’가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각 후보 진영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득표율과 순위, 조사기관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처럼 확산됐고, 이는 후보 간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는 카드뉴스 표현과 후보 방식 등

을 둘러싼 공방도 잇따랐다. 일부 후보 측이 상대 진영 홍보물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에 나섰다.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지며 갈등이 격화됐다.

특히 통합특별시장 결선 과정에서 불거진 ARS 응답 끊김 논란은 경선 이후까지 파장을 남겼다.

결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남’ 응답자의 전화 연결이 끊겼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당시 결선에 나섰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선 종료 후에도 중앙

당 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 공개와 재조사를 요구했다.

논란은 시민단체 차원의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졌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 차원의 봉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후유증은 적지 않았다. 광주 서구청장 경선에서는 후보 간 과거 이력을 둘러싼 공세가 이어졌고, 동·남·광산구청장 경선에서는 현직 구청장의 3선·재선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비주류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무안군수 경선 탈락 후보들이 공천 자를 둘러싼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당원명부 유출 논란으로 경선 일정이 연기됐던 여수에서는 탈락 후보들의 잇단 지지 선언을 두고 특정 후보 측이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이 본선 초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됐지만 지역별로 지지층 균열과 감정적 골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본선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지역인 만큼 경선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정치적 상징성까지 겹치면서 후보 간 경쟁 수위도 한층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와 유권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방식의 경선 도입은 물론, 경선 과정에서 반복되는 결선투표와 재경선 구조가 유권자의 피로도를 키우고 있는 만큼 경선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형배 통합시장 후보, ‘시민주권형 농정’ 약속

청년농·유통 등 의제 논의...1호 농정 공약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시민이 직접 농정 의제를 결정하고 행정이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민주권형 농정’을 약속했다.

민형배 후보는 최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 농정대전 정책 대안심포지엄에 초청받아 농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통합특별시 농정 방향을

논의했다. 타운홀미팅에서는 청년농·후계농, 여성농민, 농업소득, 유통·지역먹거리, 기후위기 대응·스마트팜 등 5개 분야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전문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민과 현장 주체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숙의형 타운홀 방식을 진행했다.

청년농·후계농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반과 공동체·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성농민 분야에서는 여성농민을 독립된 농업 경영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농업소득 분야에서는 생산비 부담, 가격 불안정, 유통 구조 문제를 개선해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먹거리 부과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대전환 필요성이, 기후위기 대응·스

마트팜 분야에서는 중소농의 스마트농업 지원 및 탄소중립 실천 농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분과별 논의를 거쳐 현장 투표로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한 뒤 민 후보에게 전달했다.

민 후보 캠프는 도출된 의제를 검토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농정 공약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 친환경 농산물 유통 문제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정에서 답답함이 크다”며 “친환경 농산물만 계획 생산과 안정적 유통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민형배 후보는 최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 농정대전 정책 대안심포지엄에 초청받아 농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통합특별시 농정 방향을 논의했다.

‘통합특별시 연결도시 광산’ 비전 제시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가 광산구의 미래를 열어갈 구상을 내놨다.

박병규 후보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대 전략 20개 정책을 발표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결도시 광산’을 제시했다.

그는 “산구는 광주의 최대 산업도시이자 서남권의 관문으로,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지속가능 일자리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일부는 이제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며 “민선 9기에는 사람과 산업, 문화와 행정,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플랫폼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제시한 비전은 △‘연결도



시’ 광산 △지속가능 일자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매력적인 도시 △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소통·혁신 행정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주요 정책으로는 광주중영역 환승역 세권 개발, AI·첨단산업벨트 조성, 황룡강·영산강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 군공항 이전부지 미래형 융복합도시 구상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추진, 청년의 지속가능 일자리모델 발굴·확산, 소상공인·골목경제 활성화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의 창업과 성장 지원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여성선대위 출범

“생활 밀착 여성정책 발굴”

우승희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사진) 선거대책위원회가 여성 유권자 조직 확대와 생활 밀착형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여성선대위위원회 출범을 공식 출범했다.

우 후보 측 “더 큰 영암 캠프”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영암읍 선거사무실에서 여성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여성 포섭 공작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영암지역 11개 읍·면 여성 100여명이 참석해 여성 투표 참여 확대와 여성 유권자 소통 강화, 성평등 정책 추진, 생활 밀착형 여성정책 발굴, 풀뿌리 여성 조직 확대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80년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누던 5월 광주 여성들의 정신을 계승해 우승희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 자치공동체 영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선 8기 들어 추진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 여성 들녘 화장실 지원사업 등을 언급하며, 여성일상과 현장에 맞는 생활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1980년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하는 데 여성들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우흥섭 완도군수 후보, 관광·교통 공약 내놔

“KTX 연장 철도망 구축”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우흥섭 후보(사진)가 KTX 완도 연장장과 광역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핵심으로 한 지역 발전 구상을 내놨다. 교통 접근성을 높여 관광과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를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우 후보는 “완도 발전의 핵심은 접근성과 체류성에 있다”며 “완도로 들어오는 길을 넓히고 완도에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우선 광역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



로는 △KTX 완도 연장 국가철도망 구축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완도~고흥 남해안관광도로 조기 착공 △미개발 교량 단계별 추진 △대중교통 안전 공영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등을 내걸었다.

그는 “완도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갖고 있지만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성장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며 “KTX 완도 연장장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을 통해 완도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안, 대한민국 대표 기본사회 모델 육성”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사진)가 기본소득과 의료·교육·육아·주거를 아우르는 ‘기본사회 5대 목표’를 발표했다.

박우량 후보는 19일 “신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며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민의 삶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신안에서 성공한 햇빛발전과 배양연금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매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본의료는 암과 치매를 비롯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본교육은 어린

이집부터 대학까지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기본육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주거는 모든 주거 시설에 태양광·태양열 설치를 지원하고 내부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병행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이정선, ‘학생 안전 24시 프로젝트’ 발표

등교부터 귀가까지 시 기반 안전시스템·동행 지원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사진)가 학생들의 등하교와 학원 이동, 야간 귀가까지 아우르는 ‘학생 안전 24시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최근 학생 대상 강력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이 집을 나설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교육청과 경찰,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광주형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기존 학교 안 중심의 안전 개념을 넘어 학원 이동과 야간 귀가 등 학생들의 일상 전반까지 보호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에는 학원 수업 후 귀가 학생 동행 지원, 특정 시간대 학생 전용 안전 순찰, 귀가 경로 실시간 관리 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학교별 위험지역을 데이터 기반



으로 분석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상무지구와 수완지구, 분성동, 총창로, 첩단지구, 대학가 주변 등 학생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광주형 학원 안전 특구’로 지정해 교육청·경찰·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AI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학생 안전 AI 지도’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학생 이동 경로와 범죄 발생 지역, CCTV 사각지대, 여성·청소년 위험 신고, 유흥시설 밀집도, 저조도 지역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학교별 위험지역을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안전 귀가 동선을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대중, ‘건축설계 공모 참여제’ 제안 공유

전남건축사협회 정책제안서 전달...“의무 도입을”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사진)가 지역 건축계의 상상 발전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전남건축사협회의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전남건축사협회 관계자와 정책감담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기본육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주거는 모든 주거 시설에 태양광·태양열 설치를 지원하고 내부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병행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프로젝트 노후유 수급 기회 제공 등 전남 건축계 전반을 아우르는 상상 방안이다.

김대중 후보는 “전남과 광주의 교육 대전환은 우리 지역의 기술력과 자산을 키우고 청년들이 머무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교육감에 취임하는 즉시 법적 기준을 꼼꼼히 정비해 학교 시설 설계공모부터 지역 업체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플랫폼 구축 사무소 생존권 보장 △2단계(중규모, 3억~10억) 지역 의무 공동도급(40% 이

상) 비율 설정으로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3단계(대규모, 10억 이상) 지역 건축사 설계자문단 필수 참여 체계 구축으로 대형 회를 갖고, 협회가 마련한 ‘건축 설계공모 지역 의무 참여제 도입 정책 제안서’를 전달 받고 교육청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